



## 게리 베커 교수의 한국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9월 5일 인적자본이론의 대가로서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경제학적 틀에 입각해 분석해 온 세계적인 석학 게리 베커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제노동브리프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개진된 베커 교수의 제언을 정리해 소개한다.

게리 베커(78)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인적자본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와 인종차별, 가족, 범죄 등과 같이 기존 경제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 주제들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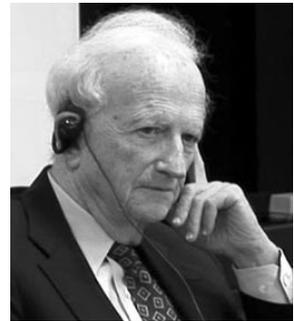
###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 노동시장의 효율성 강화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적자본, 노동자에게 투자되는 물적자본의 양(자본장비율), 기술발전 수준, 노동시장의 효율성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중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더 많은 자본이 한국에 투자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져야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방안 : 민간부문의 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각국의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정부도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이론을 보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압력이 행해지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책이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경쟁이 있다면 쉽게 창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또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엔진을 보면 신생 중소기업에서 이를 주도한다. 전 세계 500대 기업을 보면 미국 국적의 기업들의 경우 오래된 기업도 있지만 신생 기업도 많다. 월마트,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널리 알려진 기업들인데, 이들이 모두 하이테크 기업도 아니다. 반면 유럽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다. 유럽에서는 창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정도 비슷한 것 같다. 즉 창업 용이성이 매우 낮다. 세계은행 창업 용이성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5위권이고 일본이 25위권, 한국은 100위권 밖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 불황기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지만,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민간 부문에서 경쟁이 보장되며 창업 용이성이 높다면, 정부가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완전고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단기적으로 서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상호 보완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경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직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고통을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규직이더라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SK그룹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SK의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고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노동시장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인적자본 중개산업의 활성화

경제학의 목표는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유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있다. 나쁜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면 빈곤층 내지는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동시장을 좀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먼저 여성 등 소위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청년실업률도 그 원인이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 측면에서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공급이 충분하고, 비슷한 임금수준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지금 가진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유연성에 있다. 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상업용 건물 건설업으로 이동하거나 전혀 다른 업종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연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적자본에 대한 매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 부동산거래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듯이, 노동시장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기업에는 인력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맡을 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인력알선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는 고용알선서비스센터가 많다. 고속런근로자, 저속런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선업체들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경쟁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 정부의 역할 : 핵심적인 역할에 집중, 지나친 규제 개선

정부는 국가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몇가지 핵심적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대외적 안정이라고 하면 한국같은 경우에는 대북관계의 안정을 들 수 있겠고, 국내외 안정이라고 하면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범죄발생 억제력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소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조세정책, 최소한의 반독점규제 등 적절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밖에도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등 다양한 역할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나 높은 관세부과, 높은 한계세율 적용 등의 지나친 규제나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KL**